

Unveiling the North Korean Economy

북한 경제와 남북 통합

김병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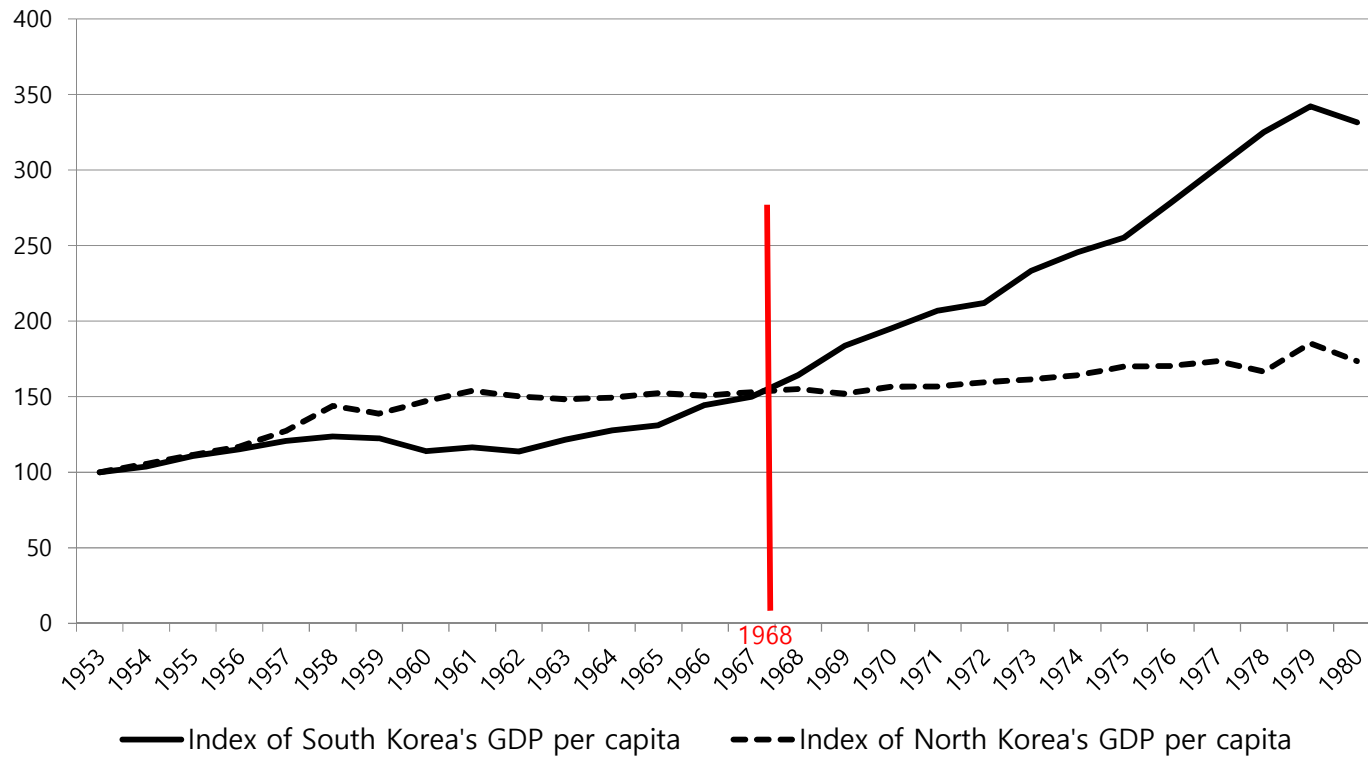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

-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근간은 다른 사회주의 체제와 유사
 - 생산수단의 국유(기업, 토지 등)
 - 경제활동의 조정 메커니즘으로서 중앙계획
-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도 존재
 - 1990년대 이전 사적 경제활동은 더욱 엄격히 통제(예: 텃밭 활동)
 - 중앙계획의 완전성, 현실성이 소련 및 동유럽에 비해 떨어짐
 - 북한 경제체제 = 중앙계획 + 대중 동원 + 왕조적 독재(현지도)
 - 이는 조정 메커니즘의 비일관성을 초래

한국과 북한의 일인당 소득 추이, 1954-1980



Source: Kim (2017); Kim et al (2007)

북한의 일인당 소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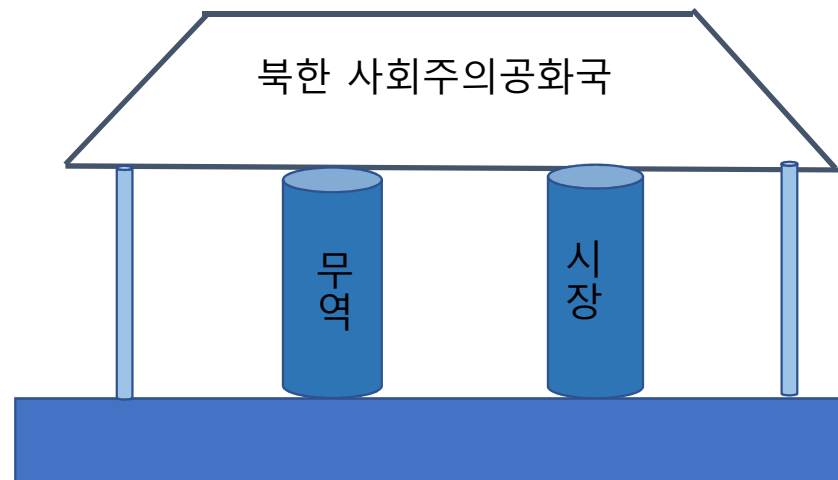
	남한(2014)	북한(2014)
일인당국민소득(시장환율기준)	27,971	770
비율	100	2.8

출처: 김병연(2017)의 업데이트; 세계은행(2014)

- 유엔은 2014년 북한의 일인당소득을 696 달러로 추정
- 일인당 소득 면에서 북한은 세계 183개국 중 165위 말리 (765 USD)와 네팔 (698 USD)과 유사

북한 경제구조

- 2016년 경제제재 이전 북한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시장과 무역



북한 시장화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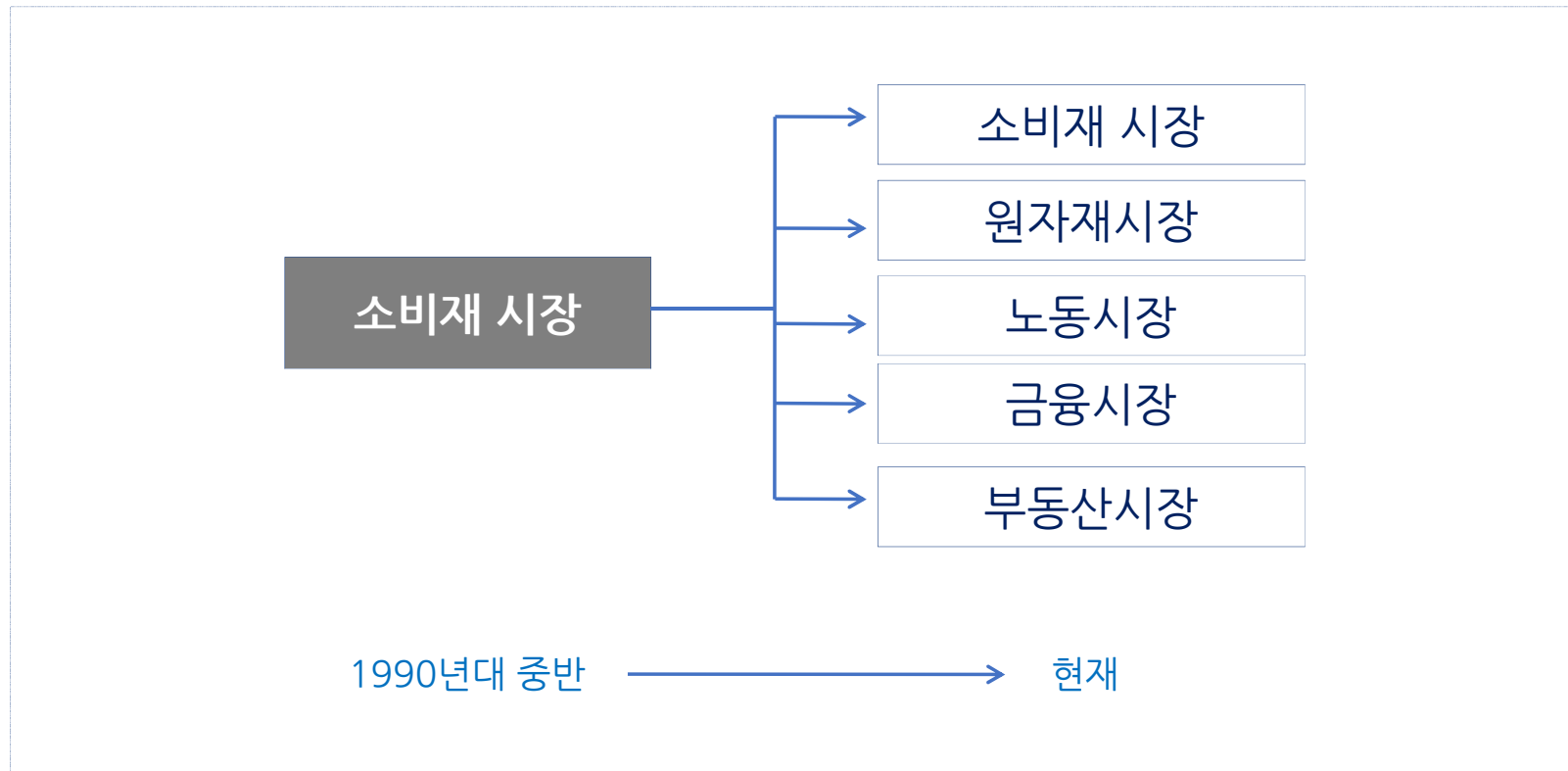
- 1997-2008년 동안 북한 가계의 식량과 소비재 획득 경로는 다음과 같이 추정됨 (Kim, 2017).

	공식 경로(배급, 국영 상점)	자가 생산	시장 구매	계
식량	24.4	15.9	59.7	100.0
소비재	13.0	19.6	67.4	100.0

- 가계 소득 중 시장 소득의 비중에서는 사회주의 역사상 선례가 없을 정도로 시장화 되어 있음

	소련(1954-1991)	북한(1996-2009)
가계 소득 중 비공식(시장) 소득의 비중	16%	70% 이상

북한 경제: 시장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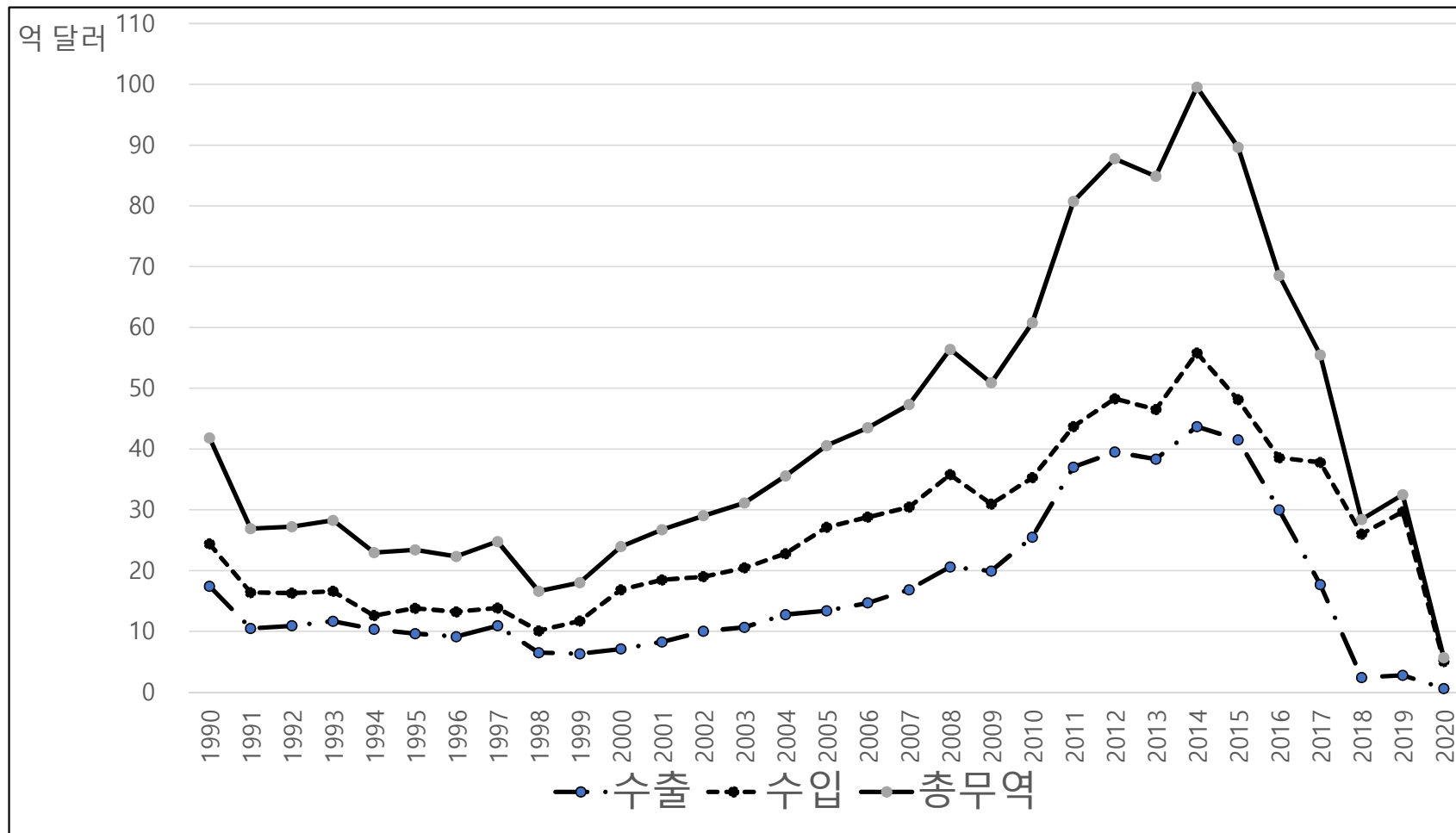
출처: 김영희(2016)

시장활동의 종류 (2011-2019)

직업 종류/ 탈북 연도		Total
장사	소매장사	28
	되거리 장사	15
	기타	1
	합계	44
농업, 채취업	농업, 가축 사육	3
	꿀, 약초 채취	1
	금 채굴	1
	합계	5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	4
	운수	1
	과외	1
	거간	1
	합계	7
가내수공업		3
경영(가게, 식당)		2
피고용인		8
대외경제활동	환전	5
	외화벌이	12
	밀수	8
	해외파견 근로	2
	합계	27
기타		1
공식 직장		2
전체 (%)		100
표본 수(명)		9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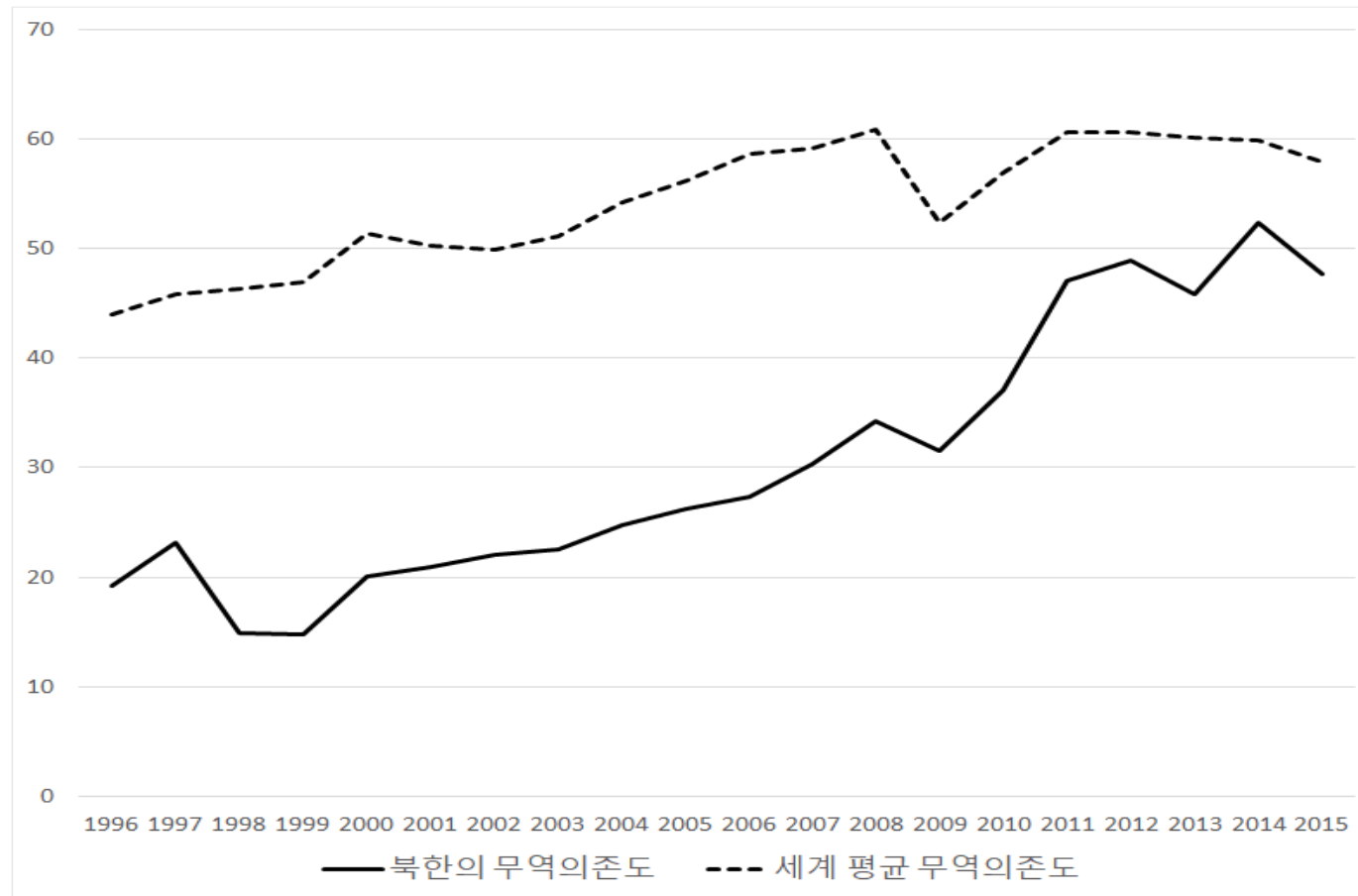
출처: 김병연(2020)

북한의 수출과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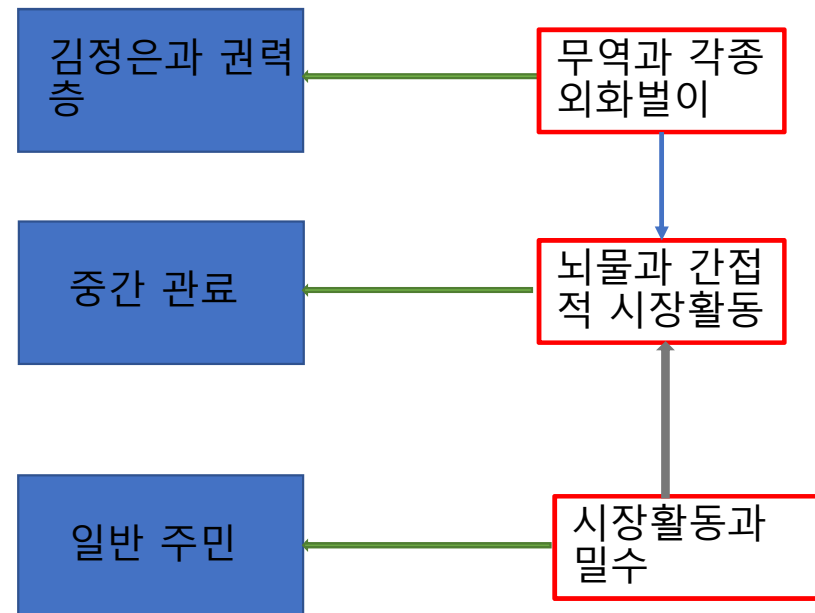
출처: updated from 김병연(2017)

북한 경제의 대외의존도



출처: 김병연(2018)

북한 주민은 어떻게 돈을 버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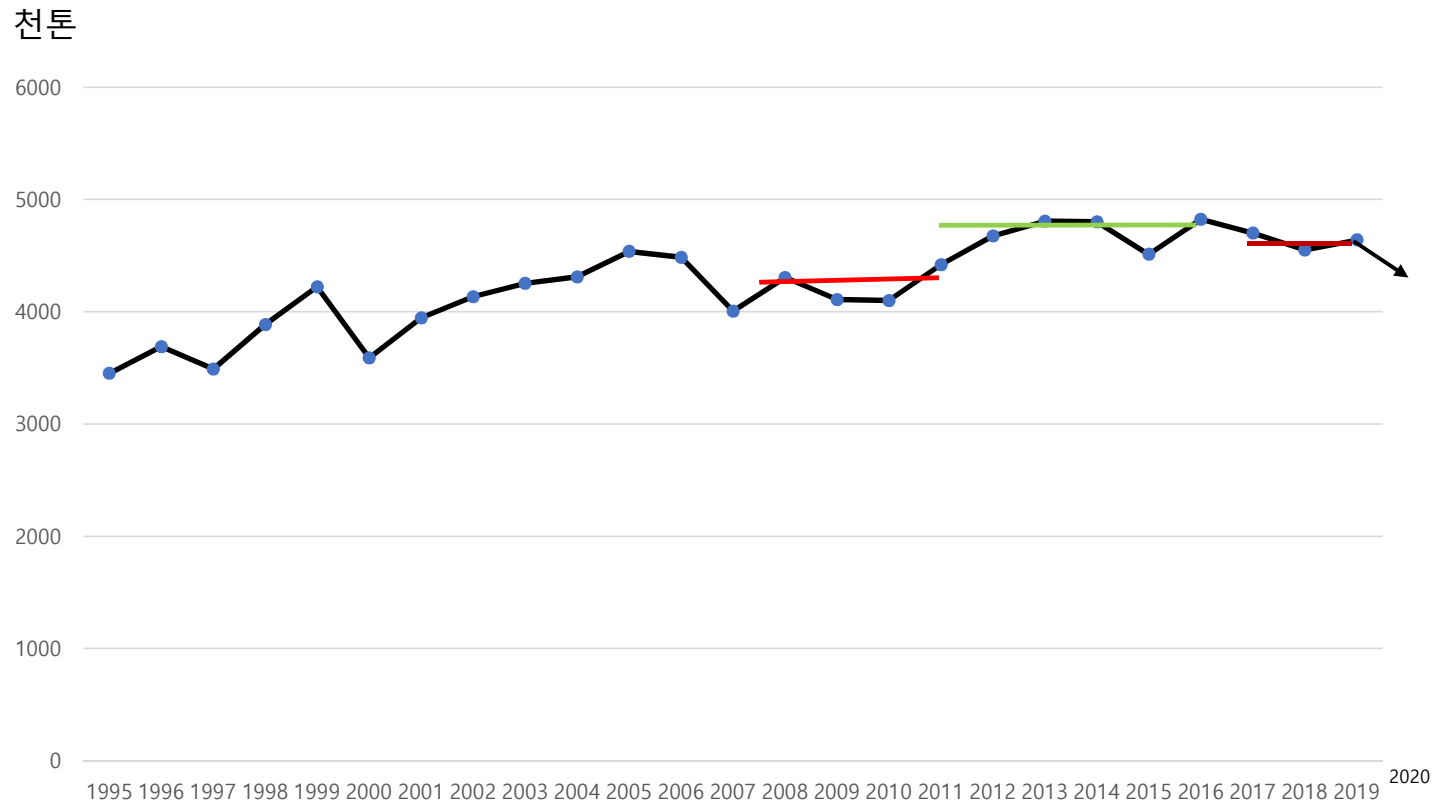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과 전망

	2017	2018	2019	2020
한국은행 추정치	-3.5	-4.1	0.4	-4.5
김병연 사전 전망치	-2% 이하	-5%	-1	-5 ~ -10

자료: 한국은행, 김병연

위의 GDP 추정치는 시장 충격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과대추정일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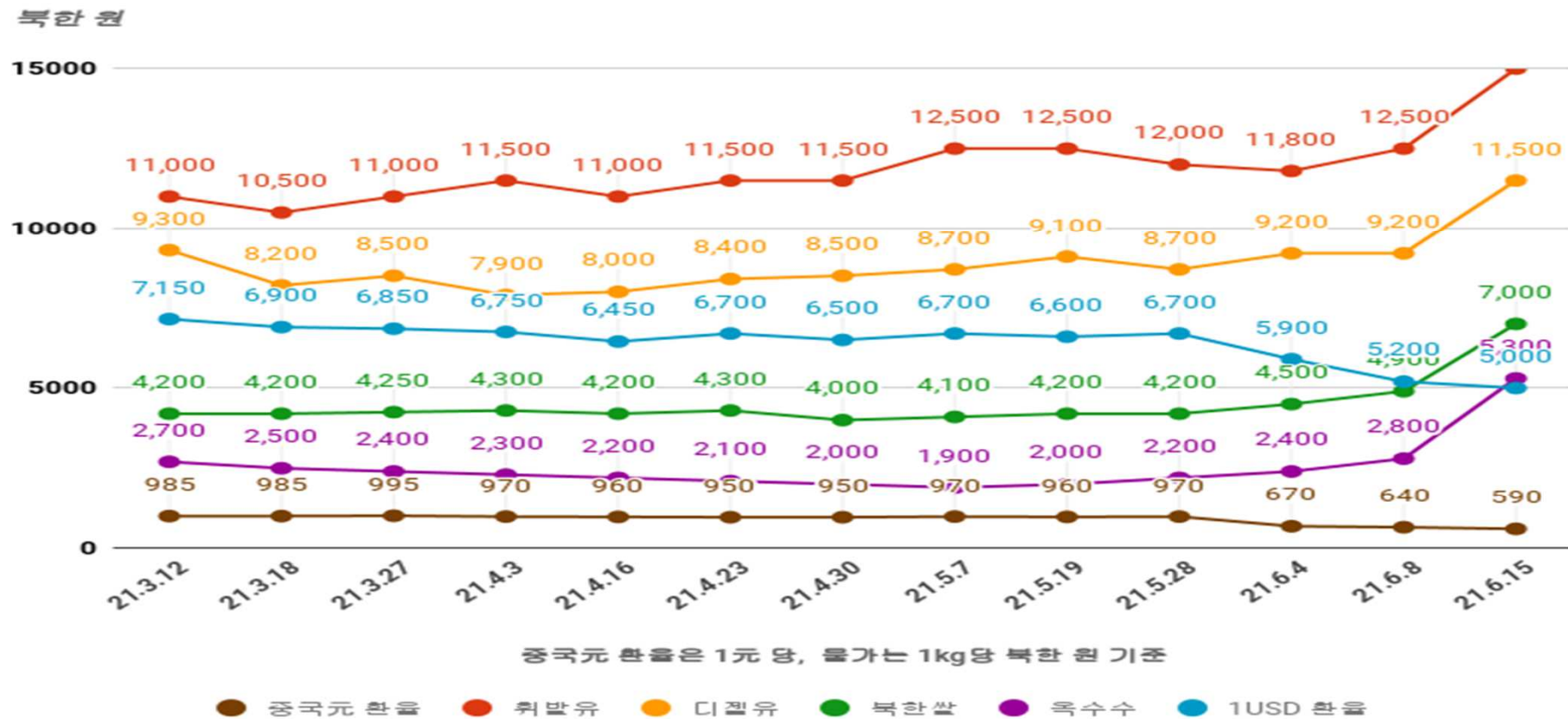
북한 식량작물생산량



자료: 농촌진흥청

- 1995-2012년 평균 식량작물생산량은 408만톤
- 2008-12년은 432만톤
- 2013-16년은 474만톤
- 2017-19년은 463만톤
- 2020년은 440만톤
- 따라서 2013-16년 동안은 2008-12년에 비해 식량작물생산량은 40만톤 가량 증가
- 제재가 작동한 2017-19년 동안은 2013-16년에 비해 10만톤 가량 감소

북한의 가격 변동



출처: 아시아프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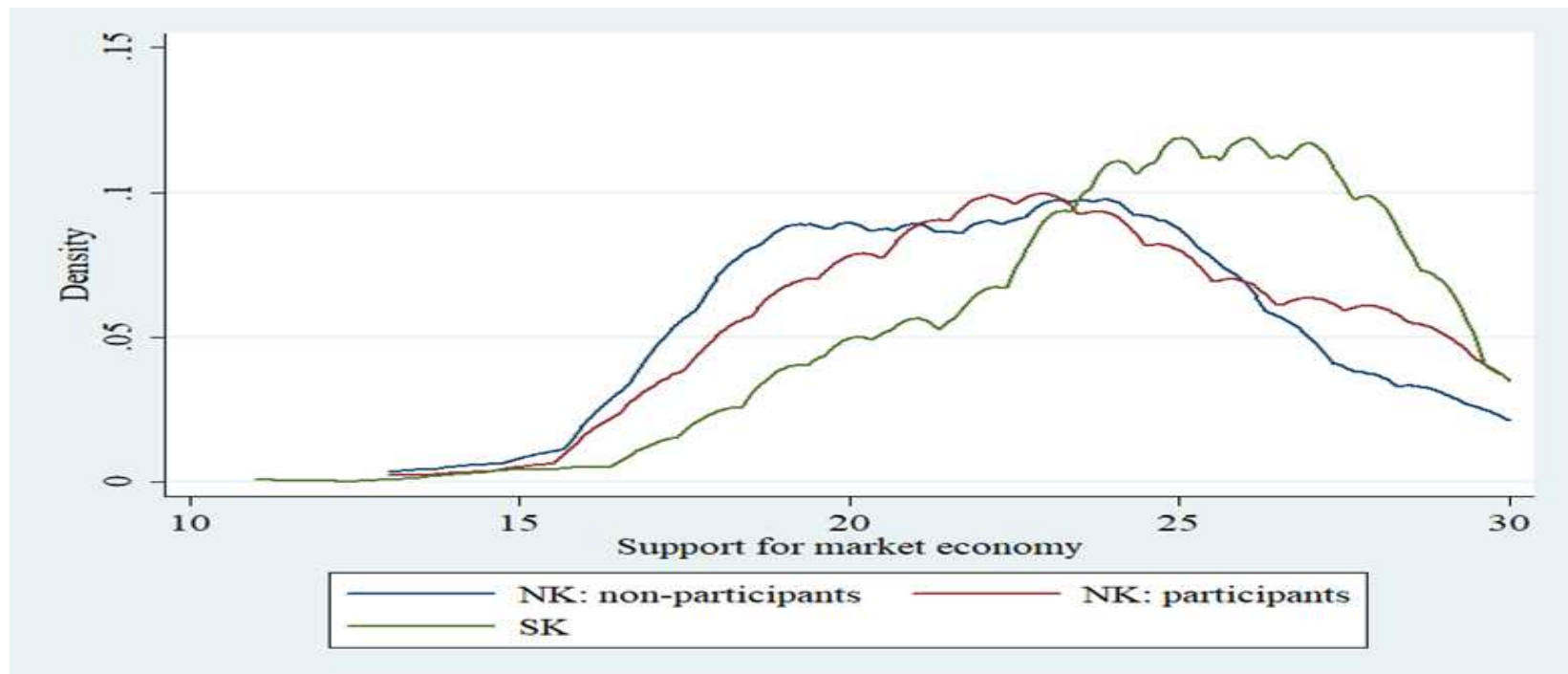
장기적으로 시간은 김정은 편이 아님

- 단기적으로는 현 체제 지속 가능성 높으나 장기적으로는 어려움
- 북한 주민 의식 변화에 상응하는 정책 필요
 - 이에 반할 경우 주민 불만과 반발 증가할 것임
 - 이 경우 중간 관료와 권력층의 현 체제 지지 가능성도 낮아짐
- 공포정치는 단기 체제 유지에는 효과적이거나 사후에 권력을 세습할 가능성은 크게 낮춤
 - 스탈린의 예

북한 시장화의 효과: 자본주의 지지도

◆ 북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 자본주의적 가치의 내재화



자료: 김병연, 김다울(2018)

김정은의 생존 코드와 제재

- ·핵경제 병진노선은 북한 발전 전략인 동시에 김정은의 생존 코드
 - ‘핵의 한계이익 = 경제의 한계이익’일 때 그의 권력 유지 가능성 극대화
- 제재는 ·핵경제 병진 전략을 ·핵경제 상충 구조로 만든 것
 - 핵 개발과 보유의 경제적 비용이 매우 클 때 의미 있는 협상이 가능할 것

현 상황에서의 각국의 목표

- 김정은의 의도
 - 핵군축과 제재 해제 및 체제안전 보장의 교환
- 한미의 목표
 - 북한 비핵화와 제재 해제 및 체제안전 보장의 교환
- 중국의 목표
 - 북한을 이용한 미국 견제와 한반도 비핵화

김정은의 전략과 약점

- 김정은의 전략
 - 버티기, 힘 빼기, 교란하기
 - 대내 동요 막기 위해 사상 투쟁, 반부패 운동
 - 경제적 자력갱생 추구
- 김정은의 약점
 - 도발 카드의 양면성
 - 경제 이해의 결핍
 - 반부패 운동은 권력층과 관료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음
- 부패의 동학
 - 相生에서 카르텔 해체로

제재 국면에서의 북한의 행동

- 버티기로 미국의 힘을 빼 미국이 핵군축 협상으로 만족하게 하려는 의도
- 코로나 사태로 이 전략에 큰 차질 발생
 - 버티기에 경제적 충격 매우 큼. 내부 동요 차단 필요성 증가
- 방역 위기가 진정되면 중국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함. 이는 북한이 더 버틸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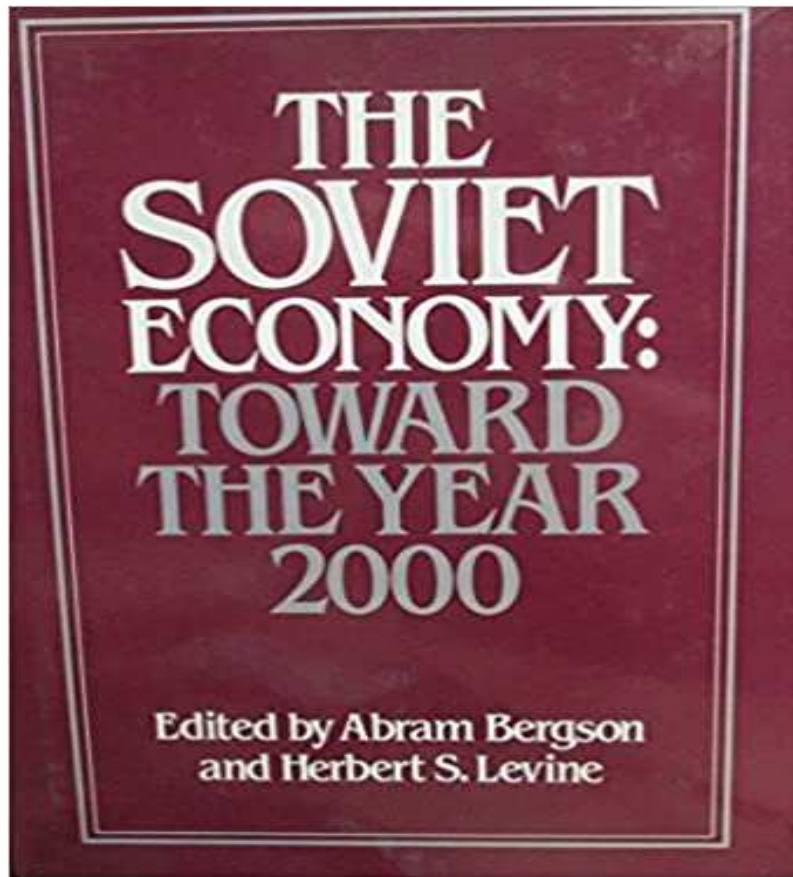
도발의 양면성

- 바이든 정부도 버틸 수 있음
 - 중국 문제가 최우선 순위가 되면서 북한 문제의 우선 순위를 낮출 수 있음
- 경제난에 비해 중국의 지원이 불충분할 경우 김정은은 딜레마에 빠짐
 - 바이든 정부가 협상에 나서도록 도발을 한다면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 줄 수 있음(중국의 핵심 이익: 한반도 안정)
 - 도발하지 않으면 경제적 내구력 계속 약화
- 그러나 중국의 선호는 북한의 연명이지 발전이 아님
 - 북중 무역이 증가할수록 북한의 장기적 발전 가능성 제약
- A bird in a cage

피해야 할 진보의 대북정책

- 북핵 용인론
 - 민족의 핵?
 - 안보 위협, 한미동맹, 남남갈등(한국핵무장론 비등)
- 先 제재해제 後 비핵화
 - 김정은은 계몽군주?
 - 제재를 우회하려는 시도도 마찬가지
- 비핵화와 경험의 병진론
 - 先 경험은 비핵화 가능성 낮춤

피해야 할 보수의 대북정책



1983년에 출간

소련 경제에 관한
미국 석학들의 분석
과 진단은 왜 틀렸나?

점진·급진통일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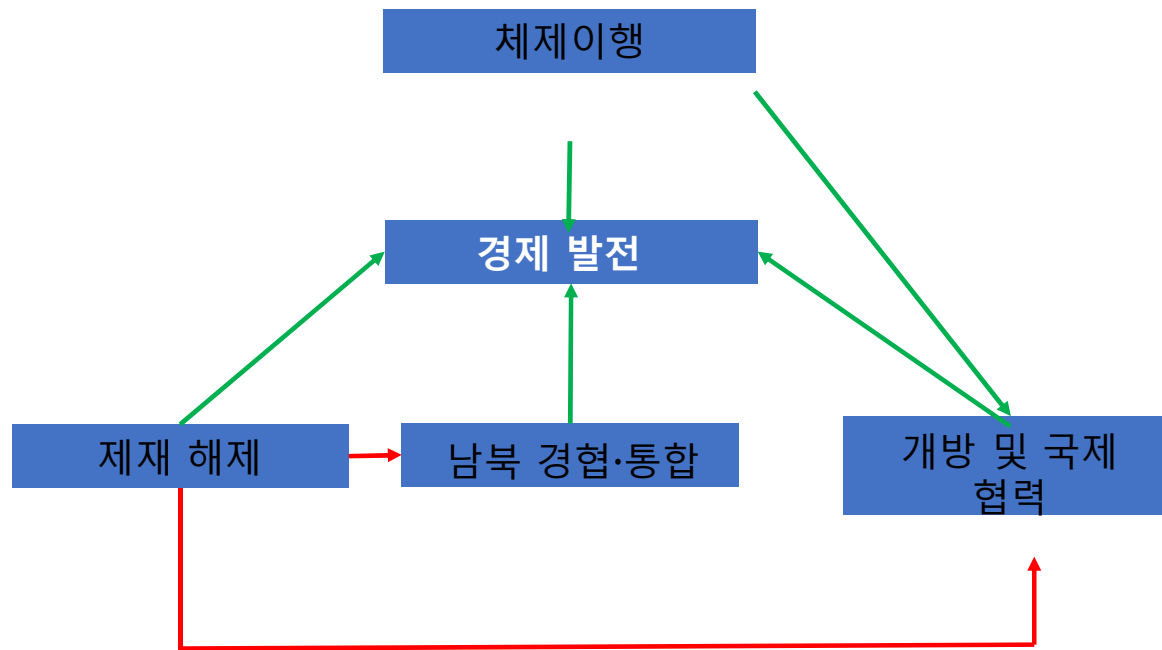
	점진통일	급진통일
장점	비용이 적게 듦	불가역적임
단점	점진적 통합이 통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음	비용이 많이 들며 정치, 군사적 대립을 강화시킴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통합 - 중국·홍콩 통합 - 중국·타이완 통합 	독일 통일
한국에의 적용시 고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의 추동력과 일관성 - 경제통합과 정치적 통일의 연결(경제발전을 이룬 북한이 통일을 원할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과 거시경제변수(환율, 이자율)의 관리 - 사회통합 가능성 - 국제적 지지 가능성 - 군사적 충돌 가능성

급진통일 리스크

	독일	남북한
재정 소요 인구비율 일인당소득비율	3000조원 4 : 1 100: 20-30	? 2 : 1 100: 3
거시경제 충격 환율 이자율	ERM으로 충격 없었음. 대신 이 태리 리라와 영국 파운드 ERM 탈퇴 정책 금리 2배로 상승	상당한 환율 충격 예상 이자율 급격 상승 예상
성장 제고 효과	동독 인적자본 수준 양호	북한 인적 자본 수준 낮음
정치 레짐의 변화 비 용	동독 주민 재분배 선호 공산당 지지율 높았음	인구비중이 2:1으로 충격 클 것임
사회 통합 비용	서독 주민과 제도의 통합 역량 높았음	남한 주민의 통합 역량 낮음

비핵화, 개혁·개방과 북한 경제 발전

- 남북 경협은 제재완화 혹은 해제 속도에 따라 그 가능성이 달라질 것임
- 북한 경제의 고속 성장을 위해서는 제재 해제를 통한 남북 및 국제 경협, 그리고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이행이 필수적임



용어의 정의

- 경제협력(Economic cooperation)
 - 두 지역 혹은 국가 상호간의 경제 관계에 관한 전반적 합의 없이 개별적인 사업 위주로 진행되는 경제교류
- 통합(Economic integration)
 - 두 지역 혹은 국가 상호간의 경제 관계에 관한 전반적 합의가 존재하며 그 결과 대상 지역이나 국가의 상호 경제적 의존도가 심화되고(관계적 통합) 제도적 균일성이 증가(제도적 통합)하는 경제공동체
- 통일(Unification)
 - 완전한 경제통합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단일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의 헌법과 공동의 정치제도를 가지는 정치 및 경제공동체

경협·통합·통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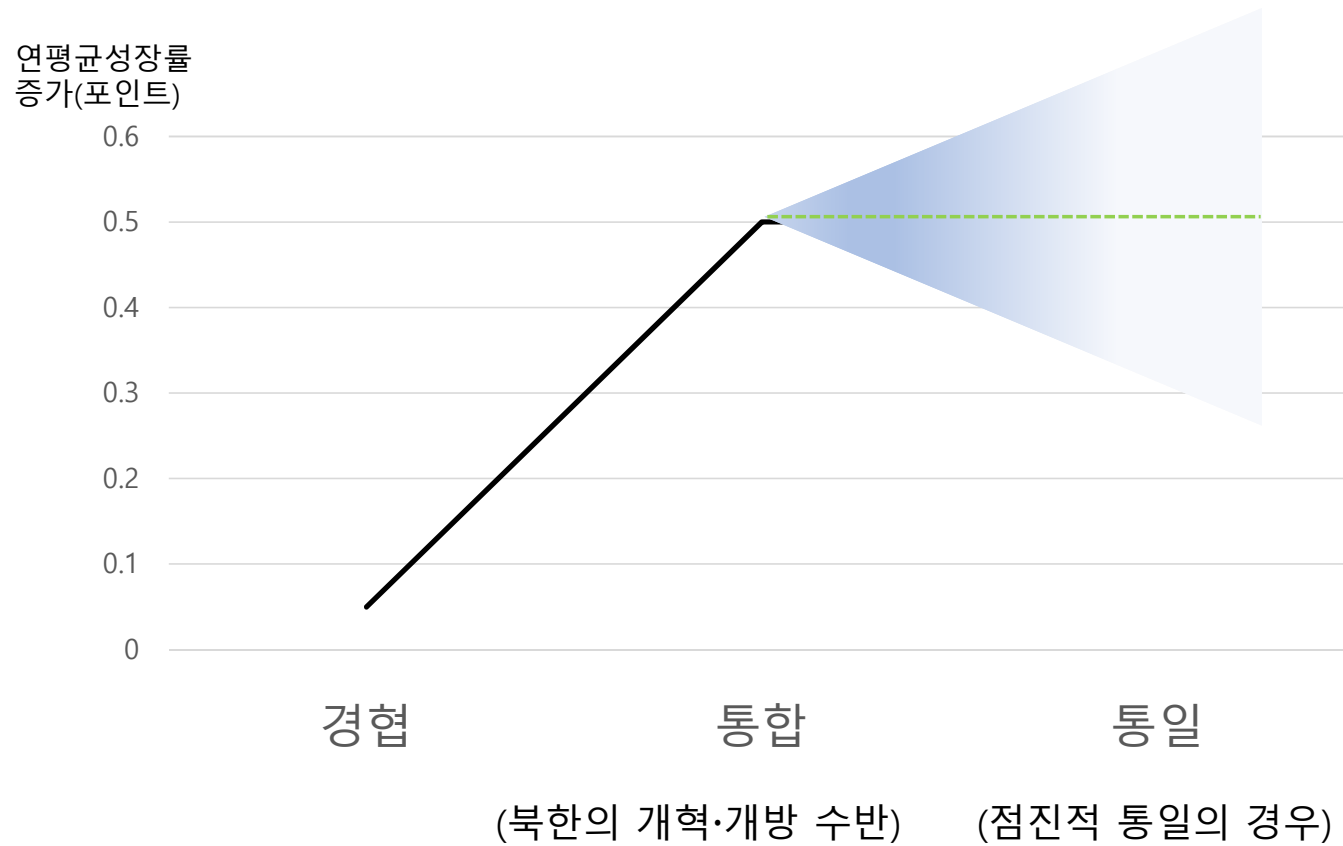
- 경협은 상호 다른 경제체제 하에서도 가능함
 - 특정 사업이나 일정 지역에 동일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교류를 제약하는 제반 요인을 제거할 수 있음
 - 경협 사업 중 일부는 경제체제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음(예: 인프라 사업)
-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예: 시장 개방)도 다른 경제체제 하에서 가능할 수 있음
- 그러나 높은 단계의 경제통합은 단일한 제도를 전제함
 - EU도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에게 시장경제제도와 민주주의를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음
 - 경제통합 단계가 높아질수록 참여 국가 사이 제도의 단일성이 증가함

경제통합의 편익

연구	성장률 추정	모형
KIEP and KIET(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성장률 40년 동안 연 8.5-14.5% 성장 - 남한 성장률 연평균 2.1-7.3% 성장 	DSGE
강문성 외(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성장률 35년 동안 연평균 6.19% 혹은 그 이하 - 남한 성장률 35년 동안 연평균 0.32% 포인트 증가 	CD함수
김병연(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성장률 35년 동안 연평균 13.1% - 남한 성장률 연평균 0.7-0.8% 포인트 증가 	성장과 체제 이행 실증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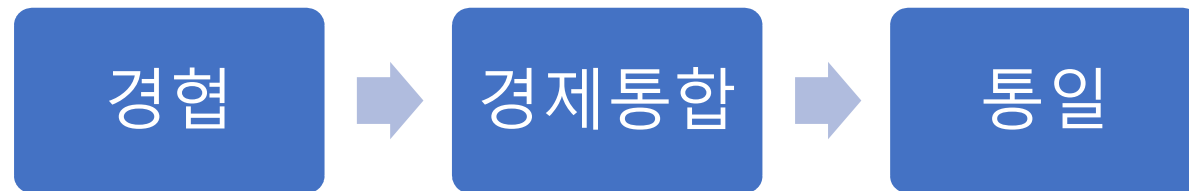
출처: Kim (2017)에서 발췌

경협과 통합, 통일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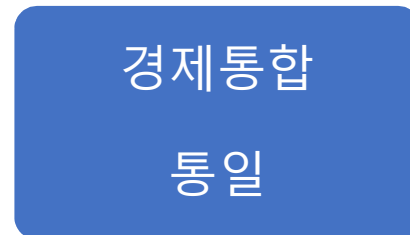


점진적 통일과 급진적 통일

- 점진적 통일



- 급진적 통일



남북 경협 의 현안

- 현재 가장 중요한 현안은 북한 비핵화일 것임.
 -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어 UN 및 미국의 대북 제재가 완화, 혹은 해제되기 전에는 의미 있는 경협이 어려울 것임.
- 일각에서는 '先경협, 後비핵화'를 주장하기도 함.
 - 의미 있는 경협은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 제재에 저촉될 가능성 높음.
 - 경협으로 북한에 외화가 유입되면 북한 비핵화가 실패할 가능성 높아짐. 이는 한국 미래에 매우 중요한 리스크가 될 것임.
 - 중요하지 않은 경협은 북한이 동의할 가능성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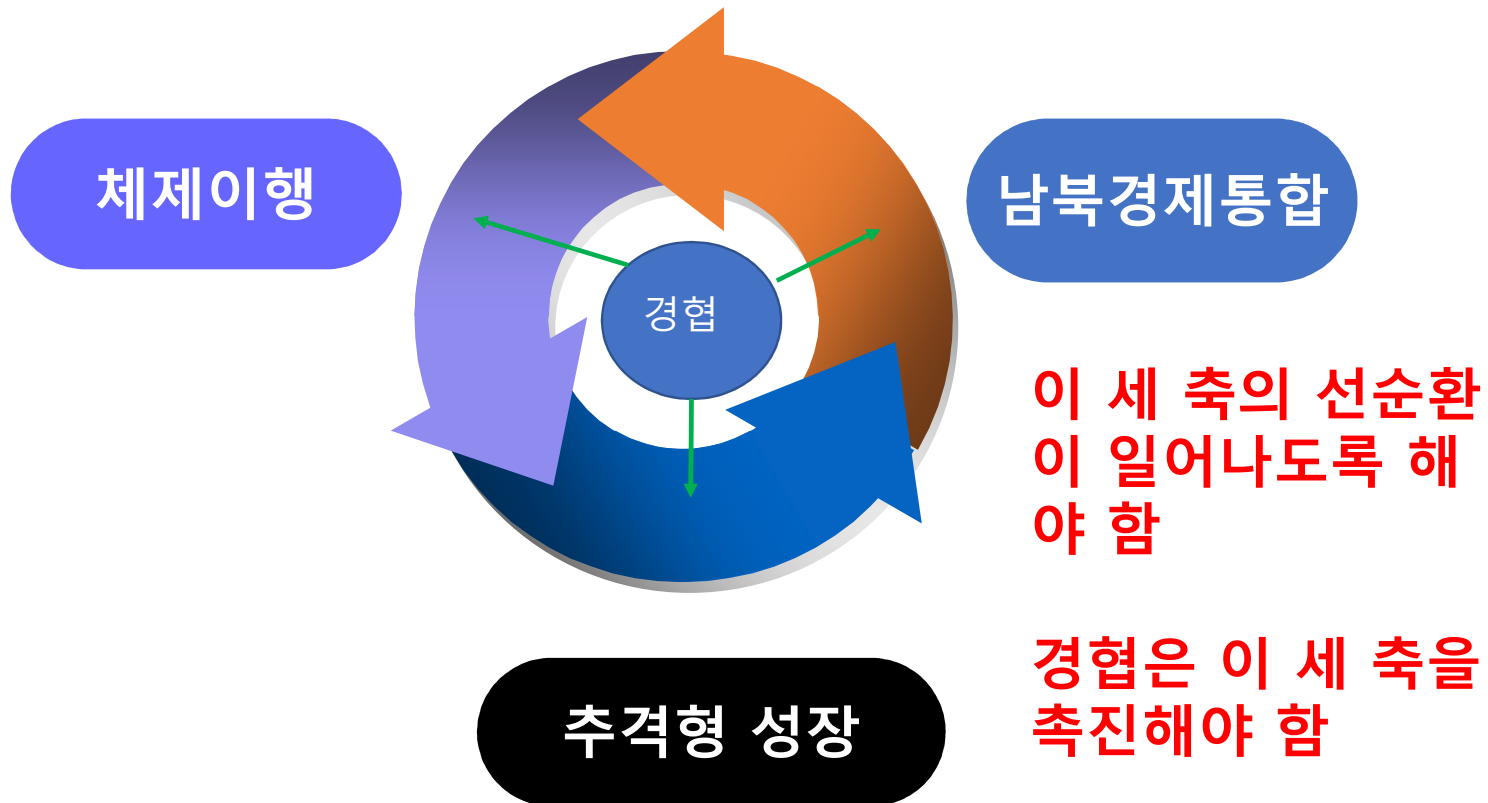
북한 경제 개발을 위한 과제

- 시장 경제로의 체제이행
 - 성장과 경제통합의 전제 조건
 - 북한 내 대규모 투자를 위한 전제 조건
- 추격형 성장
 - 북한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남한의 3%에도 미치지 못함
- 경제통합
 - 통일 이전에 남북의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어떤 나라도 이 세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했던 사례는 없음

북한 개발의 경제적 과제

	체제전환	추격형 성장	경제통합
목표	사회주의 제도(국유, 중앙 계획 등)의 자본주의로의 전환	중진국 수준으로의 경제 발전	단일 경제 형성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유럽식(사유화, 자유화, 안정화) - 중국식(쌍궤제, 특구, 농가책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개혁 - 인적 자본 개발 (교육과 건강) - R&D와 혁신(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경제 발전에 보다 유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및 서비스 시장 통합 - 생산요소 시장 통합 - 화폐 전환 - 단일 통·화재정 정책 - 단일 경제 및 사회 제도 수립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소련 및 동유럽(빅뱅식 체제전환) - 중·국베트남(점진주의 체제이행) 	한국, 타이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통합 - 중·국홍콩 - 독일 통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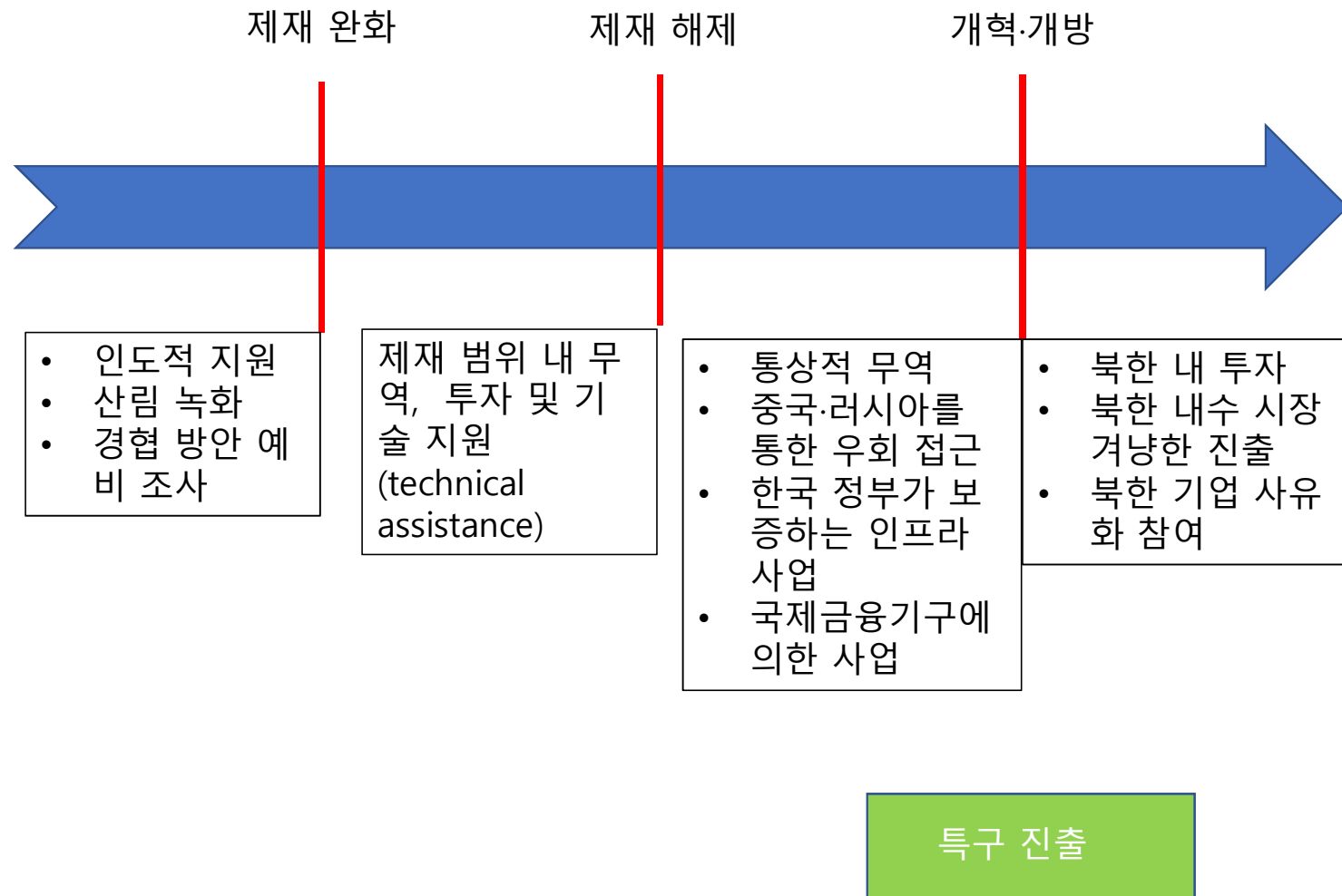
통합, 체제이행, 성장의 선순환



경협에서 통합으로

- 남북 경협은 입구, 북한의 체제이행과 성장·경제통합은 출구가 되어 함
 - 북한의 체제이행을 저해하는 경협은 바람직하지 않음
 - 북한의 성장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경협 방안을 구상해야 함
 - 경협의 경험과 제도가 축적되어 남북 경제통합으로 나아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경협은 북한의 정치적 제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정권 유지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경협은 회피할 가능성이 높음
- 경협은 비핵화와 연동돼 있음
 -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현 상태로 지속될 경우 가능한 경협은 거의 없음
 - 따라서 본격적인 경협의 시작은 비핵화에 중대한 진전이 일어나서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완화 내지 해제될 때에야 가능할 것임
 - 특히 미국의 대북제재는 포괄적 제재로서 기업이나 정부 기관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중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것임

비핵화와 개혁·개방에 따른 경험의 진전



특구형 경제 발전

- 다양한 성격의 특구를 시도할 필요 있음
 -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특구(개성공단식)
 - 미래 산업의 실험형 특구(4차 산업의 실험)
 - 남북 산업의 시너지를 고려한 특구(의·료관광, 지하자원 개발 특구)
- 경제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필요함.
 - 법적, 제도적, 물적 인프라 면에서 투자에 충분한 유인이 제공되어야 함.
 - 통·행통·신통관의 문제가 없어야 함
 - 특구 실험을 타 지역으로 확산시켜 북한의 법과 제도, 인프라를 발전시켜야 함.
 - 특구와 다른 지역의 전후방 연관 효과와 시장화와의 연계를 제고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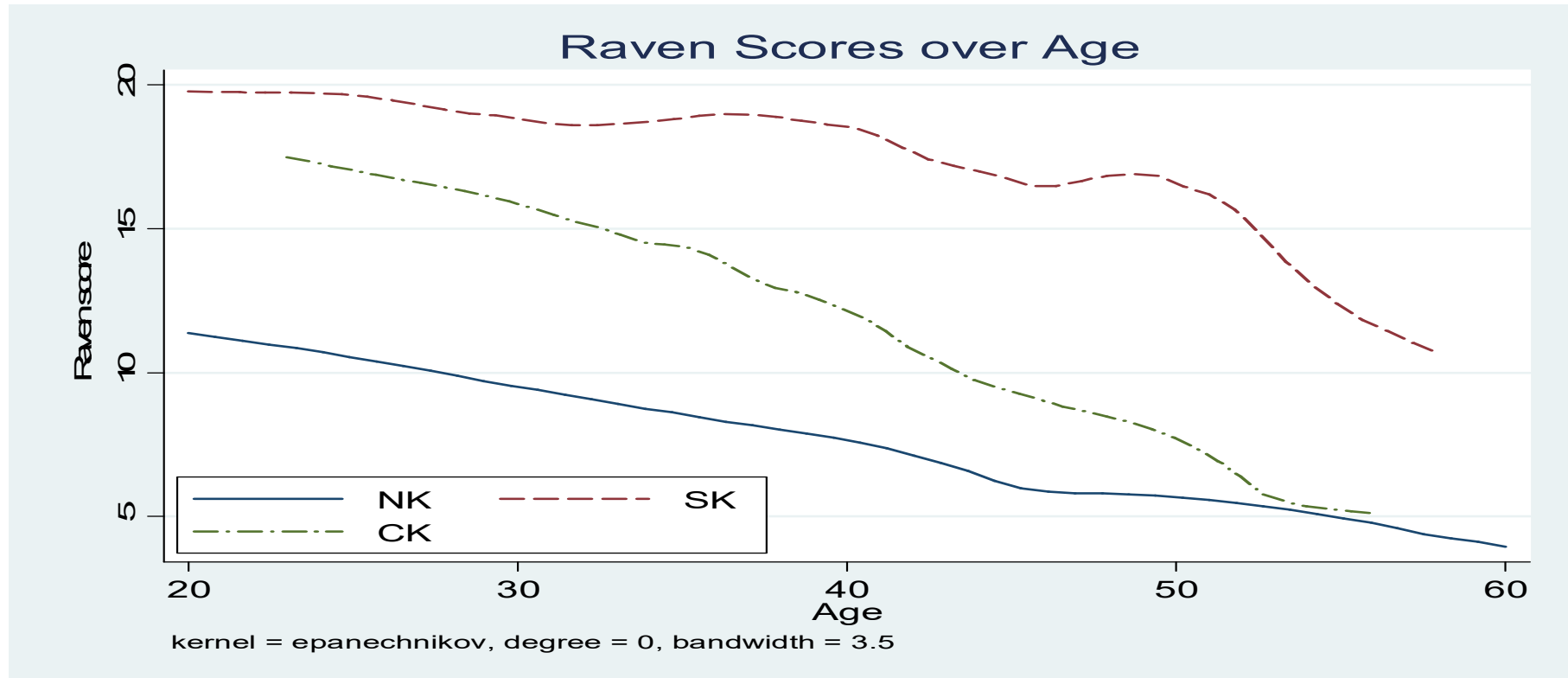
남북관계 최선의 접근

- 비핵화 → 경협 → 경제통합 → 통일이 최선의 시나리오
- 차기 정부도 비핵화에 집중 불가피
 - 실패할 경우 군사적 억지력 확보, 한미관계 등을 놓고 매우 어려운 결정해야 할 수도
- 비핵화 성공과 실패 이후의 시나리오는 매우 대조적일 것임

통합·통일의 성공과 경제 발전 요인

- 다음 4가지 요인이 경제 성공과 경제 발전 요인임
 - 자본
 - 기술
 - 인적 자본
 - 제도
- 이 중 남한이 공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 기술은 제약조건이 되지 못함
- 문제는 인적 자본의 질과 제도 문제임

레이븐 시험 (2015년 실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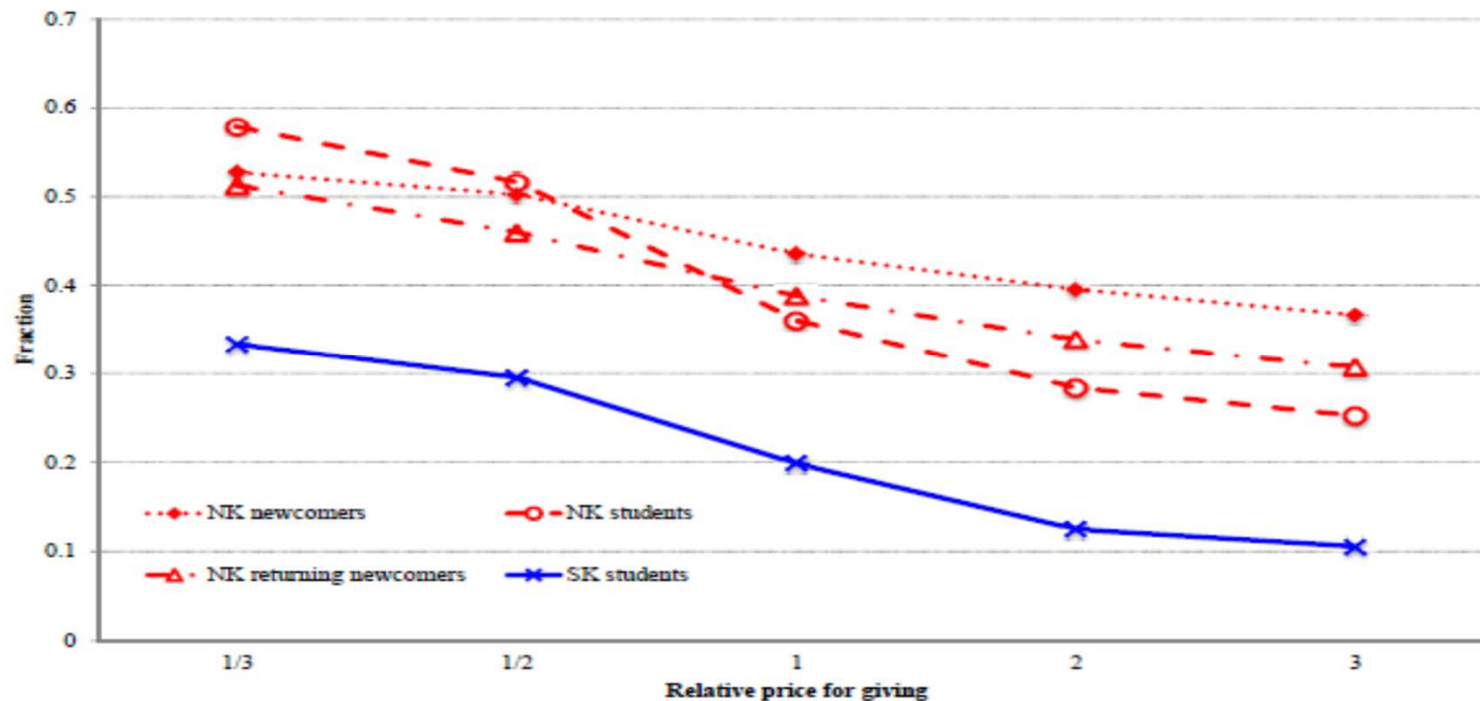


- 세 한국인 그룹 사이 유의한 차이 존재.
- 이 차이는 인구학적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계속 존재함

북한주민의 사회규범

- 통일 후 사회 및 정치 통합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남북한 주민의 가치 규범이 비슷해질 필요가 있음
- 북한 주민의 가치관은 남한 주민과 유사할까?
 -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나누는 행동(giving behavior)” 실험
 - 2011년 남한에 온지 평균 7개월이 지난 탈북민
 - 2012년 남한에 온지 5년 이상이 지난 탈북 대학생
 - 2013년에는 2011년에 조사한 탈북민 추적 조사

남북 경제통합의 과제: 남북한 주민의 사회규범의 차이



출처: 김병연 외(2014)

- 나누는 게임에서 북한이탈주민(남한에 갓 정착한 자들, 북한 출신 남한 대학생, 남한 정착한지 2년 지난 자들)은 남한 학생에 비해 훨씬 평등주의적임.

좋은 통일을 위한 정책

- 북한 인적 자본의 발전 지원:
 - 남한 자본 및 기술과 북한의 인적 자본 수준의 미스배치 가능성
- 북한 제도 발전을 위한 기술지원:
 - 이러한 기술 지원의 성장 제고 효과는 여타 경험보다 더 클 수 있음
- 남한의 인프라와 제도의 공유 혹은 공여:
 - 남한의 공항, 항만, 도로, 철로의 사용
 - 남한 공공기관은 북한 경제 개발을 과제 중 하나로 포함
 - 이는 북한의 점프 스타트(jump start)에 기여할 수 있음